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와 상관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 만약 이 최대치를 보편적 법칙으로 받아들인다면, 즉 모든 사람들이 법이 자신의 정의 개념에 반대될 때마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여 어떤 정치적 또는 법적 체제도 시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법이 특정한 가치나 권리, 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나 권리를 침해할 때만 도덕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가치와 권리 중 어떤 것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존 로尔斯(John Rawls)의 《정의론》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 책에서 로尔斯는 모든 협력적 사회 구조가 공유해야 할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을 식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질문을 제기한다: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상적인 협상 상황에서 어떤 기본적인 분배 규칙에 합의할 것인가? 이 이상적인 협상 상황은 로尔斯가 "원래의 위치(original position)"라고 명명한 것으로, 두 가지

- a. 사회적 기본 자원의 평등 분배.
- b. 협상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자원 및 재능 분배에서의 운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다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당사자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로尔斯는 이를 "무지의 망토"라고 부른다).

로尔斯는 이러한 협상 조건 하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할 때, 공평하고 정당한 분배 규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원래의 위치에서 합의가 이뤄질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정의의 첫 번째 원칙: 모든 개인은 다른 모든 개인에게도 동일한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넓은 기본 자유의 체계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정의의 두 번째 원칙: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a)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b)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직책과 직업과 관련되어야 한다.